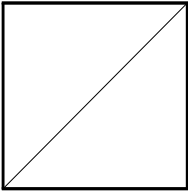


공 개



의안번호	제 109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24. 4. 17. (제 7 차)	

대구은행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

금융위원회회의 안건

제 출 자	위원장 김 주 현
제출 연월일	2024. 4. 17.

1. 의결주문

대구은행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하며 「질서 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부여된 의견제출 기한 내에 제재 조치 대상자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의 조치안을 그대로 확정한다.

2. 제안이유

대구은행(검사기간 : 2023.8.9. ~ 9.22.)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확인된 위법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려는 것임

3. 주요골자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이라 함)에서 정하고 있는 실지명의 금융거래 의무 및 금융거래 비밀보장 의무를 위반한 대구은행에 대해서는 ‘업무의 일부 정지 3월*’을, 관련 직원에 대하여는 각각 ‘감봉3월’, ‘견책’ 및 ‘주의’ 조치하고

* 은행예금 연계 증권계좌 개설업무를 3개월 정지 조치

「은행법」 제69조에서 정하고 있는 금융사고 예방대책 준수 의무 및 「금융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소비자보호법」”이라 함) 제69조에서 정하고 있는 계약서류 제공의무를 위반한 대구은행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함

4. 참고사항

가. 금융감독원장이 안전 상정을 요청한 사항임

나. 관계법규 : <붙임1>

다. 관계부서 협의

- 제4차 제재심의위원회(2024.2.7.) : 심의필
- 제5차, 제6차, 제7차 안전검토 소위원회(2024.3.14., 2024.3.28., 2024.4.12.) : 심의필

<별지>

대구은행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 다 음 -

1. 조치내용

□ 기관에 대한 조치

- 대구은행 : 업무의 일부정지 3월*
과태료 20억원** 부과

* 은행예금 연계 증권계좌 개설업무를 3개월 정지 조치

**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후 의견제출 기한내 자진납부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따라 부과금액의 20%를 감경

- 조치사유 : 실지명의 금융거래 의무 및 금융거래 비밀보장 의무 위반, 금융사고 예방대책 관련 내부통제기준 미준수(10억원), 예금성상품 계약 시 계약서류 제공의무 위반(10억원)
- 법적근거 : 「금융실명법」 제3조(금융실명거래) 제1항, 제4조(금융거래의 비밀보장) 제1항 및 제5조의2(행정처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금융실명법 시행령」”) 제4조의2(실명거래의 확인 등), 제5조(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의 범위), 제6조(거래정보등의 범위) 「은행법」 제34조의3(금융사고의 예방) 제1항 및 제69조(과태료) 제1항 「은행법 시행령」 제20조의3(금융사고 예방대책 등) 제1항 및 제3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별표4] 「금융소비자보호법」 제23조(계약서류의 제공의무) 제1항 및 제69조(과태료) 제1항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제22조(계약서류의 제공) 제1항 및 제3항, 제5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별표4]

□ 직원에 대한 조치

○ 대구은행 대리 ○○○ 등 ××명 : 감봉 3월

대구은행 부장 □□□ 등 ××명 : 견책

대구은행 본부장 ▶▶▶ 등 ××명 : 주의

－ 조치사유 : 실지명의 금융거래 의무 및 금융거래 비밀보장 의무 위반

－ 법적근거 : 「금융실명법」 제3조(금융실명거래) 제1항, 제4조(금융거래의 비밀보장) 제1항 및 제5조의2(행정처분)

「금융실명법 시행령」 제4조의2(실명거래의 확인 등), 제5조(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의 범위), 제6조(거래정보등의 범위)

<조치대상자 상세 명세>

구분	직급	관련자 구분	성명	조치의견
본점	▼▼▼▼▼▼ 본부장	감독자	◇◇◇◇	주의
	△△△△△△부 부장	감독자	◇◇◇◇	견책
영업점	대리	행위자	◇◇◇◇	감봉 3월
	행원	행위자	◇◇◇◇	감봉 3월
	대리	행위자	◇◇◇◇	감봉 3월
	대리	행위자	◇◇◇◇	감봉 3월
	계장	행위자	◇◇◇◇	감봉 3월
	대리	행위자	◇◇◇◇	감봉 3월
	대리	행위자	◇◇◇◇	감봉 3월
	대리	행위자	◇◇◇◇	감봉 3월
	대리	행위자	◇◇◇◇	감봉 3월
	행원	행위자	◇◇◇◇	감봉 3월
	대리	행위자	◇◇◇◇	감봉 3월
	대리	행위자	◇◇◇◇	감봉 3월
	계장	행위자	◇◇◇◇	감봉 3월
	계장	행위자	◇◇◇◇	감봉 3월
	행원	행위자	◇◇◇◇	감봉 3월
	계장	행위자	◇◇◇◇	감봉 3월
	대리	행위자	◇◇◇◇	감봉 3월
	계장	행위자	◇◇◇◇	감봉 3월

구분	직급	관련자 구분	성명	조치의견
영업점	계장	행위자	◇◇◇◇	감봉 3월
	계장	행위자	◇◇◇◇	감봉 3월
	계장	행위자	◇◇◇◇	감봉 3월
	대리	행위자	◇◇◇◇	감봉 3월
	부지점장	행위자	◇◇◇◇	감봉 3월
	차장	행위자	◇◇◇◇	감봉 3월
	과장	행위자	◇◇◇◇	감봉 3월
	대리	행위자	◇◇◇◇	견책
	대리	행위자	◇◇◇◇	견책
	대리	행위자	◇◇◇◇	견책
	대리	행위자	◇◇◇◇	견책
	대리	행위자	◇◇◇◇	견책
	대리	행위자	◇◇◇◇	견책
	대리	행위자	◇◇◇◇	견책
	대리	행위자	◇◇◇◇	견책
	대리	행위자	◇◇◇◇	견책
	계장	행위자	◇◇◇◇	견책
	대리	행위자	◇◇◇◇	견책
	대리	행위자	◇◇◇◇	견책
	대리	행위자	◇◇◇◇	견책
	대리	행위자	◇◇◇◇	견책
	계장	행위자	◇◇	견책
	대리	행위자	◇◇◇◇	견책
	계장	행위자	◇◇◇◇	견책
	대리	행위자	◇◇◇◇	견책
	계장	행위자	◇◇◇◇	견책
	계장	행위자	◇◇◇◇	견책
	대리	행위자	◇◇◇◇	견책
	계장	행위자	◇◇◇◇	견책
	행원	행위자	◇◇◇◇	견책
	행원	행위자	◇◇◇◇	견책
	대리	행위자	◇◇◇◇	견책
	행원	행위자	◇◇◇◇	견책
	계장	행위자	◇◇◇◇	견책
	계장	행위자	◇◇◇◇	견책
	계장	행위자	◇◇◇◇	견책
	행원	행위자	◇◇◇◇	견책
	계장	행위자	◇◇◇◇	견책
	행원	행위자	◇◇◇◇	견책
	행원	행위자	◇◇◇◇	견책
	계장	행위자	◇◇◇◇	견책
	계장	행위자	◇◇◇◇	견책
	대리	행위자	◇◇◇◇	견책
	행원	행위자	◇◇◇◇	견책
	계장	행위자	◇◇◇◇	견책

구분	직급	관련자 구분	성명	조치의견
영업점	행원	행위자	◇◇◇◇	견책
	계장	행위자	◇◇◇◇	견책
	행원	행위자	◇◇◇◇	견책
	계장	행위자	◇◇◇◇	견책
	행원	행위자	◇◇◇◇	견책
	행원	행위자	◇◇◇◇	견책
	행원	행위자	◇◇◇◇	견책
	행원	행위자	◇◇◇◇	견책
	행원	행위자	◇◇◇◇	견책
	행원	행위자	◇◇◇◇	견책
	행원	행위자	◇◇◇◇	견책
	대리	행위자	◇◇◇◇	견책
	행원	행위자	◇◇◇◇	견책
	행원	행위자	◇◇◇◇	견책
	행원	행위자	◇◇◇◇	견책
	행원	행위자	◇◇◇◇	견책
	행원	행위자	◇◇◇◇	견책
	행원	행위자	◇◇◇◇	견책
	행원	행위자	◇◇◇◇	견책
	행원	행위자	◇◇◇◇	견책
	계장	행위자	◇◇◇◇	견책
	계장	행위자	◇◇◇◇	견책
	행원	행위자	◇◇◇◇	견책
	행원	행위자	◇◇◇◇	견책
	행원	행위자	◇◇◇◇	견책
	계장	행위자	◇◇◇◇	견책
	계장	행위자	◇◇◇◇	견책
	차장	행위자	◇◇◇◇	견책
	차장	행위자	◇◇◇◇	견책
	부지점장	행위자	◇◇◇◇	견책
	차장	행위자	◇◇◇◇	견책
	부지점장	행위자	◇◇◇◇	견책
	차장	행위자	◇◇◇◇	견책
	차장	행위자	◇◇◇◇	견책
	차장	행위자	◇◇◇◇	견책
	차장	행위자	◇◇◇◇	견책
	과장	행위자	◇◇◇◇	견책
	대리	행위자	◇◇◇◇	견책
	계장	행위자	◇◇◇◇	견책
	대리	행위자	◇◇◇◇	견책
	계장	행위자	◇◇◇◇	견책
	계장	행위자	◇◇◇◇	견책
	계장	행위자	◇◇◇◇	견책
	행원	행위자	◇◇◇◇	견책
	차장	행위자	◇◇◇◇	견책

구분	직급	관련자 구분	성명	조치의견
영업점	출장소장	감독자	◇◇◇◇	견책
	부지점장	감독자	◇◇◇◇	견책
	부지점장	감독자	◇◇◇◇	견책
	부지점장	감독자	◇◇◇◇	견책
	차장	감독자	◇◇◇◇	견책
	부지점장	감독자	◇◇◇◇	견책
	금융팀장	감독자	◇◇◇◇	견책
	차장	감독자	◇◇◇◇	견책
	금융팀장	감독자	◇◇◇◇	주의
	부지점장	감독자	◇◇◇◇	주의
	차장	감독자	◇◇◇◇	주의
	부지점장	감독자	◇◇◇◇	주의
	차장	감독자	◇◇◇◇	주의
	출장소장	감독자	◇◇◇◇	주의
	부지점장	감독자	◇◇◇◇	주의
	부지점장	감독자	◇◇◇◇	주의
	부지점장	감독자	◇◇◇◇	주의
	금융팀장	감독자	◇◇◇◇	주의
	부지점장	감독자	◇◇◇◇	주의
	차장	감독자	◇◇◇◇	주의
	차장	감독자	◇◇◇◇	주의
	차장	감독자	◇◇◇◇	주의
	부지점장	감독자	◇◇◇◇	주의
	차장	감독자	◇◇◇◇	주의
	부지점장	감독자	◇◇◇◇	주의
	부지점장	감독자	◇◇◇◇	주의
	출장소장	감독자	◇◇◇◇	주의
	부지점장	감독자	◇◇◇◇	주의
	차장	감독자	◇◇◇◇	주의
	부지점장	감독자	◇◇◇◇	주의
	차장	감독자	◇◇◇◇	주의
	차장	감독자	◇◇◇◇	주의
	차장	감독자	◇◇◇◇	주의
	과장	감독자	◇◇◇◇	주의
	차장	감독자	◇◇◇◇	주의
	차장	감독자	◇◇◇◇	주의
	차장	감독자	◇◇◇◇	주의
	차장	감독자	◇◇◇◇	주의
	과장	감독자	◇◇◇◇	주의
	차장	감독자	◇◇◇◇	주의
	차장	감독자	◇◇◇◇	주의
	차장	감독자	◇◇◇◇	주의

구분	직급	관련자 구분	성명	조치의견
영업점	차장	감독자	◇◇◇◇	주의
	부지점장	감독자	◇◇◇◇	주의
	차장	감독자	◇◇◇◇	주의
	과장	감독자	◇◇◇◇	주의
	부지점장	감독자	◇◇◇◇	주의
	차장	감독자	◇◇◇◇	주의
	차장	감독자	◇◇◇◇	주의
	과장	감독자	◇◇◇◇	주의
	과장	감독자	◇◇◇◇	주의
	차장	감독자	◇◇◇◇	주의
	차장	감독자	◇◇◇◇	주의
	차장	감독자	◇◇◇◇	주의
	차장	감독자	◇◇◇◇	주의
	차장	감독자	◇◇◇◇	주의
	과장	감독자	◇◇◇◇	주의
	과장	감독자	◇◇◇◇	주의
	부지점장	감독자	◇◇◇◇	주의
	차장	감독자	◇◇◇◇	주의
	과장	감독자	◇◇◇◇	주의
	과장	감독자	◇◇◇◇	주의
	과장	감독자	◇◇◇◇	주의
	부지점장	감독자	◇◇◇◇	주의
	차장	감독자	◇◇◇◇	주의

2. 조치사유

가. 실지명의 금융거래 의무 및 비밀보장 의무 위반

- 「금융실명법」 제3조 제1항 등에 의하면 금융회사 등은 거래자의 실지명의로 금융거래를 하여야 하고, 실지명의는 주민등록증이나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의 장이 발급한 증표 등에 의하여 확인하여야 하며

「금융실명법」 제4조 제1항 등에 의하면 금융회사에 종사하는 자는 명의인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됨에도

- 대구은행 ○○○○○지점 등 ☆☆개 영업점 직원 ×××명은 20xx.x.xx. ~20xx.x.xx. 기간 중 대구은행에서 은행예금 연계 증권계좌(甲증권계좌)를 개설한 이○○ 등 고객 ×,×××명과 관련하여, 해당 거래시점에 고객들의 금융거래의사를 확인하지 않는 등 정당한 실지명의 확인 없이 동 고객들 명의의 은행예금 연계 증권계좌(乙증권계좌) ×,×××건을 추가로 임의 개설하였고

그 과정에서 해당 고객들의 서면 등에 의한 동의 없이 해당 고객들의 대구은행 예금 계좌번호 등을 ♡♡♡♡증권 등 ☆☆개 증권사에 임의로 전달함으로써

「금융실명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실지명의 확인 의무 및 금융거래의 비밀보장 의무를 위반하였음

- 아울러, △△△△△부(現 △△△△△△부)는 은행예금 연계 증권계좌 개설을 독려하면서, 영업점에서 불건전 영업행위 등이 발생할 소지에 대비하여 필요한 사전조치를 취하여야 할 직제상 관리·감독 책임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 계좌개설 관련 영업행위로 인해 이미 민원이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고, 준법감시부의 내부통제강화 요청 공문 등을 통하여 사전에 주의를 기울일 것을 요청받았음에도 은행예금 연계 증권계좌 개설업무 과정에서의 관리·감독을 소홀히 함

< 관련규정 >

1. 「금융실명법」 제3조 제1항, 제4조 제1항 및 제5조의2
2. 「금융실명법 시행령」 제4조의2, 제5조 및 제6조

나. 금융사고 예방대책 관련 내부통제기준 미준수

- 「은행법」 제34조의3 제1항 등에 의하면 은행은 지점의 금융사고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과거에 발생한 금융사고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사고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여 내부통제기준에 반영하고 이를 준수

하여야 하고,

대구은행은 금융실명제 관련 업무 취급 시 실명확인 업무 및 금융거래의 비밀보장을 철저히 할 것 등의 내용이 포함된 내규 「금융사고예방지침」을 제정·운영하는 등 관련 금융사고 재발 방지대책은 마련하였으나,

- 대구은행 ◆◆◆◆◆지점 등 ☆☆개 영업점 직원 ×××명은 20xx.x.xx. ~20xx.x.xx. 기간 중 고객 ×,×××명 명의의 증권계좌 ×,×××건을 개설하는 과정에서 해당 고객들의 금융거래의사를 확인하지 않는 등 정당한 실명확인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으며, 해당 고객들의 서면상 동의 없이 각 고객의 은행 예금 계좌번호 등 「금융실명법」상 거래정보에 해당하는 정보를 증권사에 송부하는 등 금융사고 예방 등을 위해 마련된 내규 「금융사고예방지침」을 준수하지 아니하였음

< 관련규정 >

1. 「은행법」 제34조의3 제1항 및 제69조 제1항
2. 「은행법 시행령」 제20조의3 제1항 및 제31조, [별표4]
3.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20조, [별표3]

다. 예금성상품 계약 시 계약서류 제공의무 위반

- 「금융소비자보호법」 제23조 제1항 등에 의하면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는 금융소비자와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금융상품의 약관 등의 계약서류를 서면교부, 우편·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의 방식으로 금융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하는데도
- 대구은행은 △△△△△부(現 △△△△△부)가 증권계좌 연계 예금상품 계약 체결 시 금융상품 계약 체결 내역 및 관련 서류를 해당 고객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제공하는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하면서, 동 상품관련 제공 대상 서류 중 “증권계좌개설서비스이용약관”을 누락하는 방식으로 시스템을 부적정하게 구축·운영한 결과

20xx.x.xx. ~20xx.x.xx. 기간 중 ☸☸☸☸부 등 ☆☆☆개 영업점에서

금융소비자 ××,×××명과 증권계좌 연계 예금상품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류인 “증권계좌개설서비스이용약관”을 지체 없이 제공하지 아니하
였음

< 관련규정 >

1. 「금융소비자보호법」 제23조 제1항 및 제69조 제1항
2.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 및 제3항, 제51조, [별표4]

관 계 법 규

1. 금융실명법 관련

□ 「금융실명법」

제3조(금융실명거래) ① 금융회사등은 거래자의 실지명의(이하 “실명”이라 한다)로 금융거래를 하여야 한다.

⑦ 실명거래의 확인 방법 및 절차, 확인 업무의 위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금융거래의 비밀보장) ①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는 명의인(신탁의 경우에는 위탁자 또는 수익자를 말한다)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이하 “거래정보등”이라 한다)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에게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사용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거래정보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의2(행정처분) ①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등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지시를 위반한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거나 해당 금융회사등의 영업에 관한 행정제재처분의 권한을 가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3. 기관경고

②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해당 금융회사등의 영업에 관한 행정 제재처분의 권한을 가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3.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지시를 위반하여 건전한 금융거래의 질서 또는 거래자의 이익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③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등의 임원 또는 직원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지시를 위반한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하여 줄 것을 해당 금융회사등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2. 직원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

다. 감봉

라. 견책

마. 주의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실명거래의 확인) ① 금융거래를 할 때 실지명의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증표·서류에 의하여 확인한다.

1. 개인의 경우

가.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는 주민등록증. 다만, 주민등록증에 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교육기본법」에 따른 학교의 장이 발급한 것으로서 실지명의를 확인이 가능한 증표 또는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주민등록표 초본과 신분증을 증명할 수 있는 증표에 의하여 확인한다.

제5조(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의 범위) 법 제4조에 따른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는 금융회사등의 임·직원 및 그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으로서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를 취급·처리하는 업무에 사실상 종사하는 자로 한다.

제6조(거래정보등의 범위) 법 제4조제1항 및 이 영 제5조에 따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는 특정인의 금융거래사실과 금융회사등이 보유하고 있는 금융거래에 관한 기록의 원본·사본 및 그 기록으로부터 알게 된 것(이하 “거래정보등”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금융거래사실을 포함한 금융거래의 내용이 누구의 것인지를 알 수 없는 것(당해 거래정보등만으로 그 거래자를 알 수 없더라도 다른 거래정보등과 용이하게 결합하여 그 거래자를 알 수 있는 것을 제외한다)을 제외한다.

2. 은행법 관련

□ 「은행법」

제34조의3(금융사고의 예방) ① 은행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금융사고 예방대책을 마련하여 내부통제기준에 반영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함

1. 지점(대리점, 국외현지법인 및 국외지점을 포함한다. 이하 제2호에서 같다)의 금융사고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6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5의3. 제3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은행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부과·징수한다.

□ 「은행법 시행령」

제20조의3(금융사고 예방대책 등) ① 법 제34조의3 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2. 과거에 발생한 금융사고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사고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

제3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69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별표 4] 과태료의 부과기준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금액
타. 은행이 법 제34조의3 제1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69조 제1항 제5호의3	6,000만원

3. 금융소비자보호법 관련

☐ 「금융소비자보호법」

제23조(계약서류의 제공의무) ①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및 금융상품자문업자는 금융소비자와 금융상품 또는 금융상품자문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금융상품의 유형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서류를 금융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내용 등이 금융소비자 보호를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서류를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계약서류 제공의 방법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7. 제23조제1항을 위반하여 금융소비자에게 계약서류를 제공하지 아니한 자

☐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제22조(계약서류의 제공) ① 법 제23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이하 “계약서류”라 한다)를 말한다.

2. 금융상품의 약관

③ 법 제23조제1항 본문에 따라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및 금융상품자문업자가 계약서류를 제공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제공한다. 다만, 금융소비자가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특정 방법으로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방법으로 제공해야 한다.

1. 서면교부

2. 우편 또는 전자우편

3.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

제5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6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별표 4] 과태료의 부과기준

1. 일반기준

가. 금융위원회는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횟수,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이거나 면제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법인	법인이 아닌 자
하. 법 제23조 제1항을 위반하여 금융소비자에게 계약서류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법 제69조 제1항제7호	5,000만원	2,500만원

4.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 규정 관련

□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17조(기관에 대한 제재) ① 금융위설치법, 금융산업구조개선법 및 금융업관련법의 규정 등에 의거 금융기관에 대하여 취할 수 있는 제재의 종류 및 사유는 다음 각호와 같다.

2. 영업·업무의 일부에 대한 정지

- 나. 금융기관의 건전한 영업 또는 업무를 저해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건전경영을 훼손하거나 당해 금융기관 또는 금융거래자 등에게 재산상 손실을 초래한 경우
- 다. 제3호의 영업점 폐쇄, 영업점 영업의 정지조치 또는 제4호의 위법·부당행위의 중지 조치를 받고도 당해 영업점营业을 계속하거나 당해 행위를 계속하는 경우
- 라. 제7호의 기관경고를 받고도 동일 또는 유사한 위법·부당행위를 반복하는 경우

제18조(임원에 대한 제재) ① 금융위설치법, 금융산업구조개선법 및 금융업관련법의 규정 등에 의거 금융기관의 임원에 대하여 취할 수 있는 제재의 종류 및 사유는 다음 각호와 같다.

4. 주의적 경고

제3호 각목의 1에 해당되거나 위법·부당행위의 동기, 목적, 방법, 수단, 사후수습 노력 등을 고려할 때 정상참작의 사유가 있거나 위법·부당행위의 정도가 제3호의 제재에 해당되는 경우보다 가벼운 경우

5. 주의

제4호에 해당되거나 위법·부당행위의 동기, 목적, 방법, 수단, 사후수습 노력 등을 고려할

때 정상참작의 사유가 크거나 위법·부당행위의 정도가 제4호의 제재에 해당되는 경우보다 경미한 경우

② 감독원장은 금융기관의 임원이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임원에 대하여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금융위에 건의하여야 하며, 제1항 제3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감독원장은 주된 행위자로서 위법·부당행위를 한 금융기관의 임원이 과거 재직하였던 금융기관에서 주된 행위자로서 동일 또는 유사한 위법·부당행위(이미 제재를 받은 행위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제1항 각 호의 제재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신설 2016. 3. 22.>

④ 감독원장은 제1항 제1호의 조치를 동항 제2호의 조치와 함께 취할 것을 금융위에 건의할 수 있다. 다만, 금융관련법규에 따라 제1항 제1호의 조치와 동항 제2호의 조치를 함께 취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조(직원에 대한 제재) ① 감독원장은 금융관련법규에 따라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금융위에 금융기관의 직원에 대한 면직요구 등을 건의하거나 당해 금융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에 대한 면직, 정직, 감봉, 견책 또는 주의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1. 금융기관의 건전성 또는 금융소비자 권익을 크게 훼손하거나 금융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
2. 당해 금융기관의 내부통제체제가 취약하거나 제2항에 의한 자율처리필요사항이 과거에 부적정하게 처리되는 등 자율처리필요사항을 통보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감독원장은 금융기관의 직원(사실상 이사·감사 등과 동등한 지위에 있는 미등기임원 등을 제외한다)의 제1항 각호 외의 위법·부당행위에 대하여 당해 금융기관의 장에게 자율처리필요사항을 통보할 수 있다.

③ 감독원장은 주된 행위자로서 위법·부당행위를 한 사실상 이사·감사 등과 동등한 지위에 있는 금융기관의 미등기 임원 등이 과거 재직하였던 금융기관에서 주된 행위자로서 동일 또는 유사한 위법·부당행위(이미 제재를 받은 행위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제1항의 제재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운영과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0조(과징금 및 과태료의 부과) ① 감독원장은 금융기관 또는 그 임직원이 금융업관련법에 정한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대상이 되는 위법행위를 한 때에는 금융위에 과징금 등의 부과를 건의하여야 한다. 당해 위법행위가 법령 등에 따라 부과 면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부과 면제를 건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의하여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를 금융위에 건의하는 경우에는 <별표2>과징금 부과기준 및 <별표3>과태료 부과기준에 의한다.

<별표3> 과태료 부과기준

2. 과태료 산정방식

- 가. 금융업관련법상 정해진 과태료부과 대상자별 법정최고금액(금융업관련법령 등에서 위반 행위의 종류별로 부과금액을 정하고 있는 경우 그 규정된 해당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과태료부과 기준금액으로 한다.
- 나. 하나의 행위가 2개 이상의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위반행위에 대하여 정한 과태료 중 가장 중한 과태료를 부과하며, 이를 제외하고 2개 이상의 위반행위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각 위반행위에 대하여 정한 과태료를 각각 부과한다. 다만, 2개 이상의 동일한 종류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각각 부과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2개 이상의 동일한 종류의 위반행위를 반복한 경우에는 반복된 행위의 시간적·장소적 근접성, 행위자의 단일성, 침해된 법 규정의 동일성에 따라 행위의 동일성이 인정된다면 이를 하나의 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
- 다. 위반행위의 동기 및 결과를 고려하여 법정최고금액의 일정비율로 예정금액(동일인의 2개 이상의 위반행위가 경합하여 과태료를 각각 부과하는 경우 각 위반행위별 예정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산정한다.
- 라. 위반자에게 가중·감면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 예정금액을 가중·감면하여 과태료 부과금액을 산정한다.
- 마. 금융업관련법령 및 감독규정에서 업권별·위반행위 유형별로 별도의 기준을 정하는 경우 그 기준에 따른다. 이 경우 그 근거를 검사결과 조치안에 명시하여야 한다.
- 바. 과태료 부과에 있어 이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을 제외하고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3. 예정금액의 산정

- 가. 과태료 부과대상자에 대하여 위반행위의 동기 및 결과를 고려하여 예정금액을 다음 표와 같이 산정한다.

위반결과 \ 동기	상	중	하
중 대	법정최고금액의 100%	법정최고금액의 80%	법정최고금액의 60%
보 통	법정최고금액의 80%	법정최고금액의 60%	법정최고금액의 40%
경 미	법정최고금액의 60%	법정최고금액의 40%	법정최고금액의 20%

※ 위반결과를 고려함에 있어 그 구분기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중 대 : 당해 또는 동일 위반행위가 언론(「방송법」에 따른 지상파방송사업자가 전국을 대상으로 행하는 방송 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일간신문 중 서울에 발행소를 두고 전국을 대상으로 발행되는 둘 이상의 신문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공표되어 당해 금융기관은 물론 금융업계의 공신력을 실추시킨 경우 등 사회·경제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또는 금융기관·금융거래자에 손실을 초래한

경우 또는 금융기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한 기본적 의무 위반 등으로 금융질서를 저해하는 경우 등을 의미

(2) 보 통 : '중대', '경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

(3) 경 미 : 당해 또는 동일 위반행위가 언론에 공표되어 당해 금융기관의 공신력을 실추시키거나 당해 금융기관이 신뢰를 상실하여 금융상품 해지 등이 초래된 정도의 사회·경제적 파급효과가 없고 금융거래자에 피해가 없는 경우 등을 의미

※ 구분기준 중 위반동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상 : 위반행위가 위반자의 고의에 의한 경우로서 위반행위의 목적, 동기, 당해 행위에 이른 경위 등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없는 경우

(2) 중 : 위반행위가 위반자의 고의에 의한 경우로서 위반행위의 목적, 동기, 당해 행위에 이른 경위 등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또는 위반행위가 위반자의 중과실에 의한 경우

(3) 하 : 상 또는 중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나. 위반결과 및 동기에 따른 비율(이하 "예정비율"이라 한다)과 다른 비율을 적용할 사유(해당 사유가 가중 또는 감면사유와 중복되는 경우는 제외한다)가 있는 경우에는 예정비율에 10%를 가감하여 비율을 달리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그 사유를 검사결과 조치안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위반결과를 '중대'로 본다.

4. 최종 과태료 부과금액의 결정

위반자에게 다음과 같은 가중 및 감경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각 가중금액의 합에서 각 감경금액의 합을 차감한 금액을 예정금액의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가감하여 최종 과태료 부과금액을 결정한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법률상 최고한도액을 넘지 못하며, 나목(5), (6) 및 (9)의 경우에는 예정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감경할 수 있다.

가. 가중 사유

(2)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기존의 과태료 부과처분과 동일한 법규 위반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예정금액의 100분의 20 이내에서 가중할 수 있다.

나. 감경 사유

(1) 규정 제23조 제1항에 의거 제재를 감경하거나 면제하는 경우에는 예정금액의 100분의 10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다만, 제26조에 의거 제재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예정금액의 100분의 50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2) 동일 또는 유사한 위반행위의 방지를 위한 자체감사 또는 내부통제 시스템을 갖추어 시행하거나 대책을 마련하여 이행하는 등 상당한 주의 및 감독을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정금액의 100분의 50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 (3) 위반행위를 감독기관이 인지하기 전에 자진하여 신고하는 등 검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경우에는 예정금액의 100분의 50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 (4) 위반행위를 감독기관이 인지하기 전에 스스로 시정 또는 치유한 경우에는 예정금액의 100분의 50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 (5) 2개 이상의 동일한 종류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부과하려는 예정금액의 총액이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법률상 최고한도액(위반행위를 한 자가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법정 최고금액으로 한다)의 10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 (7) 2개 이상의 동일한 종류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부과하려는 예정금액의 총액이 위반 행위자의 연령(법인은 제외한다), 현실적인 부담능력, 환경 또는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황 등을 고려할 때 감경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정금액의 100분의 50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5. 과태료 부과 면제

위반자에게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를 면제할 수 있다.

- (1) 위반자의 지급불능 등 과태료 납부가 사실상 불가능하여 과태료 부과 실효성이 없는 경우
- (2)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형벌·과징금 등 실효성 있는 제재조치를 이미 받은 경우 또는 금융기관의 인가·허가 또는 등록의 취소조치, 임원의 해임권고 및 직원의 면직을 이미 받았거나 받는 경우
- (3)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위반행위를 한 경우
- (4) 공무원(금융감독원장을 포함한다)의 서면회신이나 행정지도, 기타 공적인 견해표명에 따라 위법행위를 행한 경우 등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8조(위법성의 착오)에서 정한 바와 같이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하고 행한 행위로서 그 오인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 (5)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당해 금융기관 및 임직원 각각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나, 위반행위가 당해 금융기관의 경영방침 또는 당해 금융기관의 장의 업무 집행 행위로 발생되었거나 당해 금융기관의 내부통제의 미흡 또는 감독소홀에 기인하여 발생한 경우 그 임직원
- (6) 최종 과태료 부과금액(동일인의 2개 이상의 동일한 종류의 위반행위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최종 과태료 부과금액의 합산액을 말한다)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7)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위반행위로서 금융기관 또는 금융거래자에 미치는 영향이 없거나 미미한 경우에는 견책·주의 또는 시정조치 등으로 갈음할 수 있다.

(8)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어 과태료부과 면제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기 타

최종 과태료 부과금액(동일인의 2개 이상의 동일한 종류의 위반행위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최종 과태료 부과금액의 합산액을 말한다)을 결정함에 있어서 10만원 단위 미만의 금액은 절사한다.

□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45조(직원에 대한 제재) ① 규정 제5조 및 제19조에 의한 금융기관 직원에 대한 제재의 종류 및 사유는 다음과 같다.

3. 감봉

가. 위법·부당행위를 한 자로서 금융기관 또는 금융거래자에게 상당한 손실을 초래하거나 신용질서를 문란시킨 경우

마. 직무상의 감독의무 이행을 태만히 하여 금융기관의 건전한 운영을 저해하거나 금융 질서를 문란시킨 경우

4. 견책

제3호 각목의 1에 해당되나 위법·부당행위의 동기, 목적, 방법, 수단, 사후수습 노력 등을 고려할 때 정상참작의 사유가 있거나 위법·부당행위의 정도가 제3호의 제재에 해당되는 경우보다 비교적 가벼운 경우

5. 주의

정상참작의 사유가 크거나 위법·부당행위의 정도가 상당히 경미한 경우

제46조의3(미등기 임원에 대한 제재) 이사·감사와 사실상 동등한 지위에 있는 미등기 임원에 대하여는 임원에 대한 제재기준을 준용하여 제재양정을 결정하며, 직원에 대한 제재조치를 부과한다.

제52조(관련자의 구분) ① 위법·부당행위를 행한 임직원에 대하여 신분상의 조치를 함에 있어서는 책임의 성질·정도 등에 따라 관련자를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행위자 : 위법·부당한 업무처리를 실질적으로 주도한 자

2. 보조자 : 행위자의 의사결정을 보조하거나 지시에 따른 자

3. 지시자 : 위법·부당행위를 지시 또는 종용한 자(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상위직 급자를 포함한다)

4. 감독자 : 위법·부당행위가 발생한 업무를 지도·감독할 지위에 있는 자

② 제1항에서 정한 행위자와 감독자를 판단할 수 있는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행위자 : 업무의 성질과 의사결정의 관여정도를 고려하여 실질적인 최종 의사결정권을 가지는 자
2. 감독자 : 당해 금융기관 직제를 기준으로 행위자에 대해 관리·감독할 지위에 있는 자. 직제상 감독자가 아닌 경우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행위자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때에도 또한 같다.
- ③ 제1항에 정한 보조자 및 감독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감안하여 행위자에 대한 제재보다 1단계 내지 3단계 감경할 수 있다.
 1. 위법·부당행위의 성격과 규모
 2. 감독자의 직무와 감독대상 직무와의 관련성 및 관여정도
 3. 보조자의 위법·부당행위에의 관여 정도

<별표3> 금융업종별·위반유형별 제재양정기준

I. 공통부문

I -1. 금융실명법 위반행위

1. 관련자의 구분

금융실명법(이하 ‘법’이라 한다)을 위반한 임직원에 대하여 신분상의 조치를 함에 있어서 책임의 성질·정도 등에 따라 관련자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 ① 행위자 : 위반행위를 한 자, 위반행위를 지시 또는 공모한 자 및 위반행위에 적극 개입한 자
- ② 감독자 : 위반행위인 그 업무의 처리를 실질적으로 감독할 지위에 있는 자
- ③ 보조자 : 위반행위에 단순 가담하거나 지시를 추종한 자

2. 관련자에 대한 조치기준

① 법 제3조 위반행위(금융실명거래 위반)

거래금액(위반행위 당시의 거래금액. 다만 증권거래계좌의 경우에는 입금액을 말한다)의 다과, 고의·과실 여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재한다.

책임정도*		행위자	보조자	감독자
유형①	5천만원 이하	견책	주의 이하	주의 이하
	3억원 이하	감봉 이상	감봉 이하	감봉 이하
	3억원 초과	정직 이상		
유형②		주의 이하	-	-

* 유형① : 차명거래, 고객 동의 없는 임의계좌 개설 등 금융실명거래의 기본 취지를 위반

유형② : 실지명의인의 의사에 부합하는 거래로서 단순절차 위반

(단순절차 위반행위 사항을 시정하는 등 정상참작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제재를 감경 또는 면제(현지조치 포함) 가능)

5.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관련

□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3조(법 적용의 시간적 범위) ② 질서위반행위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과태료가 변경되기 전의 법률보다 가볍게 된 때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변경된 법률을 적용한다.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 ① 행정청이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당사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17조(과태료의 부과) ① 행정청은 제16조의 의견 제출 절차를 마친 후에 서면(당사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제18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① 행정청은 당사자가 제16조에 따른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다.

② 당사자가 제1항에 따라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는 종료한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3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 ① 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행정청이 과태료부과에 관하여 미리 통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당사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2. 과태료 부과 원인이 되는 사실, 과태료 금액 및 적용 법령
3.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정청의 명칭과 주소
4. 당사자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사실과 그 제출기한
5. 법 제18조에 따라 자진 납부하는 경우 과태료를 감경받을 수 있다는 사실(감경액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금액을 포함한다)

② 당사자는 제1항 제4호의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또는 구두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고, 그 주장을 증명하기 위한 증거자료 등을 제출할 수 있다.

③ 행정청은 제2항에 따른 의견이 구두로 제출된 경우에는 진술자와 그 의견의 요지를 기록해 두어야 한다.

제5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자진 납부하는 경우 감경할 수 있는 금액은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의 범위 이내로 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소관부서	은행과 금융소비자정책과	은행검사2국
연 락 처	02-2100-2952 02-2100-2631	02-3145-7202